윤 대통령 "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 격상…국민 생명 지킬 것"

국립현충원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나라 영웅 예우는 국가의 책무"
천안함 생존 장병 유공 증서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라며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우리 후대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고, 동맹국인 미군도 3만7000명이 전사했다"며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다"라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현충원에서 열린 6·25전쟁 전사자 고 김봉학·성학 육군 일병 형제의 묘역 안장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국가 요인,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승겸 합참의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7000여명이 참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재위 시민단체 회계 감사 강화 논의

국힘, 감사보고서 기준 3억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 강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6일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보조금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시민단체 중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을 경우만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보조금 기준을 3억원으로 조정해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해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이미 기재위에 계류된 만큼,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당은 이와 함께 시민단체의 보조금 수급 현황 전수조사와 부정수급 환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당이 이처럼 시민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일부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3000만원 넘게 수령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314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야당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법의 경우 아직 이번 소위 안건에 올라갈지도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위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재정준칙 도입안이나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제정안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여당은 재정준칙 등과 별개로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큰 다른 법안이 연계될 경우 보조금 관련 논의 자체가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 역시 이번 소위에서는 가급적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정이 추진하는 공급망관리법의 경우 지난 소위에서 축조심사를 마치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일부 쟁점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자녀 특혜 채용 선관위원 전원 사퇴하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

국민의힘은 6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거센 비판 여론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또 '고용 세습', '아빠 찬스' 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 친인척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 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도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맹비난 뒤 "위기 앞에 머리를 처박은 덩치 큰 타조 같다"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오는 8일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에 고위공직자의 가족·친척은 동일한 기관에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가족·4촌 등이 특채(경력직)로 채용된 경우, 취업 경위 등을 '직업 관련 사항'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39.8%…6주만에 하락세

리얼미터…국힘 39.4%·민주 43.7%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 만에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한 39.8%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정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하락한 것은 4월 3주 차 조사 이후 6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넷째 주부터 5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며 40%대로 올라섰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7%p 높아진 57.4%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4%로 전주보다 1.3%p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3.7%로 전주보다 0.8%p 내렸다.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2%p 하락한 2.3%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1%p 내린 12.3%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